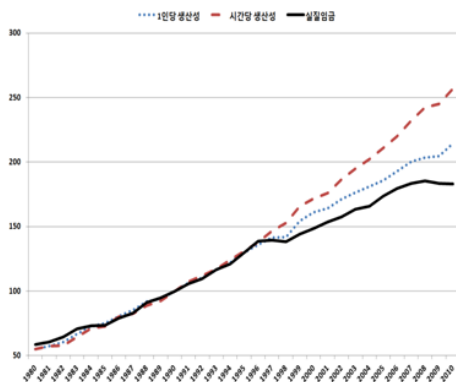


# 위기의 관점에서 농업농촌문제 바라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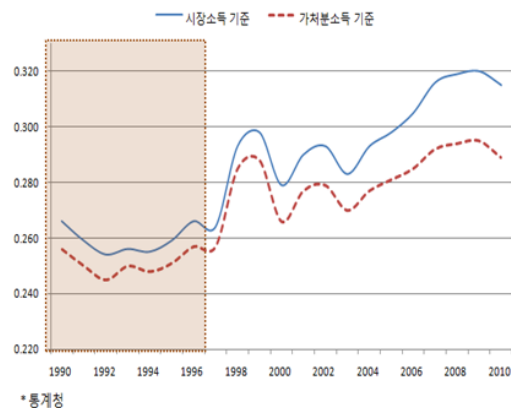
정태인(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)

## 1. 장기침체와 농업직불금제도

-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현재 세계는 “장기 침체”에 빠져 있음
  - 글로벌 불균형(수출주도&부채주도 성장 불가능), 패권 경쟁, 그리고 생태위기
  - 2014년 주류 경제학계 최대의 화두가 “지속적 침체”(secular stagnation) - 인구고령화, 저조한 기술혁신(논란의 여지),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가 원인이라는 데 동의
  - 셋 다 정책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그래도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쉬울 것(cf. 오바마의 세제개혁)
- 한국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수출주도/부채주도 성장은 앞으로 불가능
  - 빈부격차의 기본 원인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
  -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를 메워 온 것이 수출과 부채에 의한 소비였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짐



<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>



<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>

○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활로

- 농업직불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.
-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금제도는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○ 농업직불금제도는 총수요 확대정책(소비증가)인 동시에 장기 생태위기의 해결책(투자증가)

## 2. 간략한 논평 - 생태위기와 투자측면을 강조!

○ 보고서의 전반적 방향에 동의

- 현실을 고려해서 잡은 수치로 보이지만 과연 한 농가당 평균(1.5ha 기준) 연간 150만원, 청년 농부 프로그램 연간 100만원 정도로, 즉 월 20만원 정도로 “농업·농촌이 발생시키는 공익·다원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그 공공재 영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”가 될 수 있을까?

○ 보고서가 참고로 삼은 스위스와 유럽의 직불제 역시 생태 측면이 강하게 고려되어 있음

- 농산물, 특히 곡물은 안보재(security goods)이며 동시에 농업은 생태 측면에서 공유재(기후온난화 억제, 수질 및 토질 보전, 생물다양성, 경관)를 생산
- 여기서 공공재와 외부효과 부분이 필요성이 더 강한 게 아닐까? 그럴 때 도시민들의 지지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?
- 더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까? 대통령 위원회에서나 총괄 가능할 것

이론적 논거	세부 내용	필요성 정도
시장불완전성	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특수성	약
공공재	농산물의 식량안보	중
외부효과	농업의 다기능 가치(생태계 및 경관 유지 등)	중
분배정의	FTA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보상	강

### ○ 산업정책과 지역정책

- 농업정책은 식품 안전성 및 생태측면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- 식품 안전성 및 생태보전 및 개선 항목을 상호의무(cross compliance) 항목에 훨씬 더 정교하게 집어 넣어야 할 것
-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질적, 양적 확보(안보재)에 더해서 “생태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”이라는 개념 정립 필요

- cf. Robertson et.al., 2014, Farming for Ecosystem Services: An Ecological Approach to Production Agriculture, BioScience, April.

- cf. "충남대 경제학과 박진도 교수에 따르면, 홍수 조절 효과 13조 원, 수자원 함양 및 수질 정화 4조 원, 대기 정화 및 기후순화 5조원, 토양보전 및 오염원 소화 1조 원, 경관적 가치 1조 원 등 논밭의 환경적 가치는 연간 약 24조 원에 달한다"

: 농업의 생태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훨씬 더 정교한 이론과 조사에 의해 계산하고, 그 가치를 늘리기 위해 농업/농민/농촌이 해야 할 일을 정의 -> 상호의무 항목

- 이러한 정책방향이 잡히면 농업기술과 농법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것

### ○ 지역정책 - “생태공동체의 복원”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체 차원(군 단위?)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

- 생태공동체는 이미 충남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농업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에 의해 달성 가능
- 지역정책에는 기존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결합(에밀리아 로마냐형),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, 지역의 자산을 공유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거두는 산업(예컨대 올레길 관련 서비스) 등을 결합할 수 있음.

### ○ 예산

- 소득주도전략과 생태투자라는 관점을 제시하면 기본 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- 탄소세, 생태관세, 광고세 등
- 생태서비스는 공동체 단위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/개별농가 단위 보조금 지급보다 마을공동체 단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 - 이 돈을 활용해서 공동체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(공동체 자산형성 전략)
- 군 단위의 생태-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정책 생산과 실행에 참여하도록 유도

### ○ 결론

- 농업직불제도를 성장전략 변화와 생태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농업/농촌의 장기적 발전, 나아가서 경제침체와 생태문제 해결에 더욱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
-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와 농업에 관한 조사, 탄소세와 생태관세, 광고세의 효과 등을 연구할 필요